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옛 어른들 말씀에 '열두 재주 가진 놈 조석 끼니 없다'고 했는데, 어린 시절의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때 나는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 과학자라 외교관이랑 작가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였다. 어른들은 껌 껌 웃으며 셋 중 무엇이 되어도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덕담인줄 모르고 왜 하나만 하라고 하는 걸까 이상하게 여겼다. 그때는 내가 벤저민 프랭클린에 맞먹는 인재인줄 알았다.

거창한 미래상은 겨우 대학 입학 한 번을 치르며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나는 세 가지 꿈 중에 과학자의 미래를 선택하면서 이 정도 아담한 꿈이라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분자생물학이라는 낯선 학과를 선택했는데 분자 단위에서 생명현상을 연구한다는 그 학과의 취지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생명과학은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 확실했다. 나는 내 선택에 만족했다.

막상 공부를 시작해 보니 과학자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 생명 작용의 과학적 메커니즘 같은 근사한 어휘에 매혹되어 시작했지만, 연구의 실재는 끝도 없는 실험과 논문 연구, 데이터와 그래

선택에 관하여

프와 통계의 연속이었다. 알고 보니 나는 문과였구나, 속으로 후회했다. 게다가 전란해 보였던 생명과학의 미래가 실은 그리 밝지 않다는 식의 암울한 전망들이 줄을 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 연구 인력은 너무 많은데 좋은 일자리는 적다는 것이었다. 합들과 어려운데 전망까지 어둡다니,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았다.

이십 대의 용기와 낙관을 굶어모아, 나는 문학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과학자의 재목이 아닌 것을 깨달았으니 내 진짜 적성은 문학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다행히 문학계는 나를 받아 주었다. 나는 좋은 상을 받으며 근사하게 등단했고 내가 예술로서 인류에 이바지할 미래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집필 의욕을 불태웠다.

그리고 10년 뒤, 나는 또다시 번아웃에 빠져버렸었다. 알고 보니 나는 문학적 재능마저도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과도 아니었는데 문과도 아니면 난 도대체 뭐란 말인가! 게다가 문학계 전망은 더 할 수 없이 암울하다고 했다. 문학 시장은 점점 쪼그라드는데다 인구마저 급감해, 백 년 뒤에는 한글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세 번째 카드, 외교관의 꿈을 들먹일 만큼 눈치 없는 사람은 없기를 바란다. 나는 이미 사십 대였고 지칠대로 지쳤고 꿈은커녕 현재도 지탱하기 힘겨웠다. 더 황당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에 전망이 어둡다고 했던 생명과학은 이제야 빛을 보고 있다고 했다. 꾸준히 연구자의 길을 걸었던 나의 동료 선배들은 모두 중견 과학자 또는 바이오산업계의 전문가들이 되어 절

정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나름 심사숙고했던 두 번의 선택이 모두 나를 배신했고 남은 것은 남루한 현실과 몰락해 가는 미래 뿐이라니, 나의 미래가 과학자도 작가도 아니었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이 되었어야 옳았던 것일까? 의사? 변호사? 교사? 경찰? 무엇을 했어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 같았고, 또는 무엇을 했어도 아무것도 안 되었을 것 같기도 했다.

다시 십 년이 흘렀고, 나는 이제 그때보다는 좀 더 철이 들었다. 이제는 열두 재주 가진 놈이 조석 끼니 없다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그것은 선택이라는 미혹에 대한 깨우침이다. 어떤 최선의 선택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앙앙 불락하며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다.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선택은 좋은 결과와 사실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조차 있다. 어떤 선택이든 그것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긴 시간과 집념, 그리고 끝없이 매만지는 손길이다.

대한민국은 최근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다. 그 선택에 만족하는 사람도, 실망한 사람도 있다. 이전에 해왔던 선택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악착같이 싸워왔다는 점이다. 그 독한 집념으로 우리는 확실히 세계적으로 남다른 사람들이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이고, 때로는 언더러리는 이 집념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종교칼럼

화해(和解)의 봄



김원명 광주 임원방송 교무

르쳐 주셨다. 요즈음 강과 약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현상을 보면 마치 무슨 전쟁 마당을 보는 것 같아 여간 걱정되는 바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사업주들을 향해 외치는 구호나 논리가 그렇고 거기에 대응하는 기업주들의 방식도 그렇다. 더욱이 시위 군중들의 절규는 살벌하다 못해 소름이 끼치고 저지하는 방법 역시 보이는 이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어째서 우리 사회가 이토록 서로를 불신하고 증오하게 되었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장의 그늘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그간 사회가 외형적 발전을 가속화 할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는 심화되어 약자들에게 상대적 빈곤감에 따른 많은 좌절과 한이 앙금처럼 쌓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스스로 지어 받는 인과와 소치라 할 수도 있고 이전에 비하면 열 갑절도 더 좋아졌으니 모든 것 안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상책이라 할는지 모른다. 하지만 성실과 안분의 대가가 늘 허탈감만 키워 주는 현실이고 보면 분노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패배감과 분노를 씻어 주고 희망을 심어 주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미루거나 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갈등을 풀지 않고는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얽히고설켜 마진이 많은 때는 고풍이(한을 고로 풀어 나가는

곳거리) 곳을 한다고 한다. 계층 간의 갈등을 푸는 데도 고풍이 곳이라도 해야 될 듯싶다. 고풍이 곳이 맺힌 곳을 푸는 것인 만큼 잘 달래는 일이 중요하다. 그간의 응어리를 이해하고 어루만져 풀어 주는 일이 앞서야 한다.

이 한풀이를 누가 해줄 것인가. 그것은 강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란 점에서 그렇고 일의 성질로 봐서도 그렇다. 이 고풍이가 양보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여유를 가진 쪽에서 먼저 풀어야 할 때들이다. 비록 그들의 요구가 사리에 벗어나고 표현이 지나친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간의 억눌림에 대한 반동이라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에 성의 있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편의 요구에 성실히 귀를 기울이면 상대도 이면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간의 갈등 현상을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보다는 상대를 곤경에 빠뜨려 항복을 받아내려는 투쟁적인 방법만을 써왔던 것이 아닌가 싶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혈육같이 생각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초개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원수같이 안다” 하신 성현의 말씀은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지속 성장을 내세우거나 안정을 바라는 다수 여론을 빌미삼아 이 거대 정치의 위세를 등에 업고 힘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우울한 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기우라든 좋으려만...

기고

중소기업 정책의 백년대계를 기대하며



김석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광주전남연식물협동조합 이사장

성과 역동성이 저하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통계청의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 이익의 57%를 차지했다. 99%의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은 25% 수준에 불과했다. 기업당 영업 이익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522억 원에 달했으나, 중견 기업은 85억 원, 중소기업은 1억 원에 머물렀다.

위기에 놓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용의 83%를 차지하며 688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고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되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최우선 과제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분산이다. 자기 정부는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제 생태계에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협동조합의 공동 행위 허용, 지방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상생 문화 정착 등 양극화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이 없는 노동은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처지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돈을

벌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신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것이며,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최근 최대의 관심사는 단연 제20대 대통령선거였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며 각종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제시해 왔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중소기업계의 상징적인 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 중소기업은 근로자와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이다. 기업할 맛 나는 세상,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정책 공약과 비전을 굳건하게 추진해 향후 100년의 발전을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새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우리 중소기업에도 끊임 없는 혁신과 성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 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社說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두 달간의 인수위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앞으로 5년간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이끌어 가게 된다. 당선자에게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드린다.

국민의 높은 투표 참여 열기 속에 진행된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개표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이 이어졌다. 오미크론 대유행과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1·2위 후보 간 득표차도 역대 대선 사상 가장 적었다. 민심은 최종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변화를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여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엄혹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극화·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집값 안정과 영급 개혁, 남북 관계 재경비도 버거운 과제다.

향후 정국 역시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세대·성별 갈라치기와 편 가르기, 네거티브 전략이 기승을 부려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니 때문이다. 더욱이 더불어 민주당이 172석의 국회의석을 확보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당선인이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정 동력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윤 당선인에게 가장 절실한 요구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는 혁신의 자세와 통합의 리더십이다. 광주·전남에서 보수 정당 후보로는 역대 최고 득표율 기록한 윤 당선인은 그동안 호남 발전이 곧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역설해 왔다. 내 편 내 편 가르지 않는 당풍 인사와 통합정부 구성, 국가 균형 발전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광주 건설 안전 원년' 구호에 그치지 않게

광주시가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계기로 각종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한 365일 안전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를 '광주 건설 안전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홍섭 광주시장은 잇그제 간부회의에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 점검 부서 평가제'를 실시하겠다"며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와 같은 부실 공사 현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각종 공사 현장의 33개 인허가 및 배부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실시 여부, 안전 교육, 시민 안전 홍보 등 10여 개 항목의 이행 실태를 매년 연말 평가하기로 했다. 그 결과 우수 사례는 널리 전파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반을 편성해 감리원의 현장 근무와 안전 관리 매뉴얼 준수 등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에 이 같은 방침은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더 이상 광주에서 후진국형 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기술이 서 말이라도 깎아야 보배이듯, 번드르르한 말 보다 단호한 실천이 중요하다. 공사 현장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아무리 법과 제도를 강화하더라도 이를 실행해 옮기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따라서 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안일하게 방치하던 건설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살살이 찾아내고,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현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건설업체들도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전장에서는 12월 24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암묵적 휴전 상태인 '크리스마스 정전'의 기적이 일어났다. 당시 서부전선에서 만난 영국군과 독일군은 총을 버리고 공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맨몸으로 겨뤘다. 상대 군영에서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에 잠시 전투를 멈추고 한바탕 축구 대결을 펼친 이날의 사건은 훗날 월드컵 축구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스포츠는 전쟁 속에서도 서로 다른 집단과 신뢰하며 차이를 초월해 교감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었다.

러시아의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참가를 불허했고, 국제축구연맹(FIFA)은 카타르 월드컵 출전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을 두고 싸우는 스포츠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팬들에게 야구나 축구 등 프로 스포츠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지난 2년 간 코로나 19로 모든 경기가 중단되거나 관중 없이 치러질 때 일상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상륙작전, 총대를 메다, 포문, 격전지, 입법 전쟁, 직격탄 등 전쟁과 관련된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끝은 시작이다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을 끝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래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은 인류의 축제인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국제 대회에서 퇴출시킨다. 전쟁과 폭력은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스포츠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은 1950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고, 유고슬라비아도 1991년 시작된 내전으로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퇴출됐다. 2018년 월드컵을 개최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일상을 전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을 전쟁(?)처럼 치르기도 한다. 정당과 후보, 지지자들이 하나 되어 당선을 위해 벌이는 선거운동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낸다. 이 과정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 선거다. '공은 둥글다'라는 말로 유명한 독일 축구 대표팀의 전설적인 감독 제프 헤어베르거는 이런 말도 남겼다. "경기의 끝은 곧 경기의 시작이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